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경과보고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관련 활동경과(2020.12.17. 현재)

일 시	방문부서	주요내용	비 고 (면담자)
2019.09.11.(수)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제 시행 관련 절차적 부당성 항의 공문 발송	
2019.09.20.(금)	보건복지부 교육부	재학생들의 학습권 박탈 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제 시행 관련 절차적 부당성 항의 방문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조미영주무관 교육부 학사제도과 이승영사무관
2019.09.27.(금)	대전보건대학 교 강당	인증평가 탈락한 정평원의 인증기준 설명회 무효 의사진행 발의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와 협의도 없는 인증 진행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항의함	전국대학 관련교수 100여명 참석
2019.11.14.(목)	국회의원회관	인증 유예 동의서 접수 및 현안설명 (전국 73개 대학 중 62개 대학(84.9%) 동의, 전공교수 217명중 168명(77.4%) 동의, 학생 4,399명 동의)	남인순의원실 김봉겸보좌관
2019.11.15.(금)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증 유예 동의서 접수 및 현안설명 (전국 73개 대학 중 62개 대학(84.9%), 전공교수 217명중 168명(77.4%) 동의, 2,3년제 학생 4,399명, 4년제 학생 1,400명 전체 5.799명 동의)	교육부 학사제도과 이승영사무관 전달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신솔아사무관,조미영주무관
2019.11.16.(토)	언론기관배포	인증 절차 부당성 및 유예 동의서 접수현황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등

2019.11.21.(목)	국회의원회관	인증 절차 부당성 및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현황설명, 유예 협조요청 (전국 73개 대학 중 62개 대학(84.9%), 전공교수 217명중 168명(77.4%) 동의, 2,3년제 학생 4,480명, 4년제 학생 1,400명 전체 5.880명 동의)	이명수 전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보건복지위원장실 신종일비서관
2019.11.28.(목)	청와대 국민신 문고 접수	인증 절차 부당성 및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인증 유예 3년 신청	
2019.12.07.(토)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장 면담	인증절차 부당성,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현황 설명 및 유예 협조 요청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총장
2020.01.15.(수)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실 탄원서 제출 (인증절차 부당성,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현황 및 유예 당위성 탄원)	교육부장관실 비서관 보건복지부장관실 비서관
2020.04.08.(수)	언론 기고	제목 :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관리사인증인가? (주요내용 : 보건의료관리사인증 절차의 부당성과 인증유예 촉구)	한국대학신문
2020.05.13.(수)	국회의원회관	당초 인증 법개정시 관련 이해단체들과의 의견 조정 미흡 및 코로나사태등으로 인증진행 곤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인증 유예 협약 필요성 설명 및 공감대 형성	남인순의원실 김봉겸보좌관 (처음 인정)
2020.06.17.(수)	한국교육개발 원	원장실 탄원서 제출 (인증 유예 당위성 및 유예 동의 현황)	인증평가 담당 백승주연구 원 통화
2020.07.03.(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신술아사무관으로부터 법개정 의견서 제출 요청받아 우리협의회 공식 의견 접수함	
2020.07.15.(수)	한국대학신문	인증유예 진행 상황 기사화	한국대학신문 홈페이지참조

2020.08.20.(목)	국회 담당보좌관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1차 협의종료, 유예 법안개정 필요성 공감.“정평원 1년, 보복부 2년, 교육부 3년, 협의회 3년으로 의견조율을 교육 부와 보복부에 지시 했다고”함. 각 대학의 신청여부 혼란으로 8월 중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부탁함	유선 통화 (코로나19로 방문 곤란)
	교육부 담당사무관	우리 협의회 의견 존중하여 3년의 유예 기 간을 통하여 각 대학들이 infra의 구축이 필요 하다고 국회와 보복부에 전했다고함. 우리 협의회 입장을 대변해주셔서 감사한다 고 전함	
2020.08.21.(금)	보건복지부	장관실 탄원서 제출 (인증절차 부당성,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현황 및 유예 당위성 탄원)	보건복지부 장관실
2020.08.25.(화)	국회 담당보좌관	유예관련 당사자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국회 코로나 발생, 2주간 외부인 출입이 금지됨	유선통화
2020.09.04.(금)	국회 담당보좌관	현재 코로나등 일정상 간담회 개최 곤란, 협의 회도 2년 유예 동의, 의원입법으로 9.18일까지 제출 약속	유선통화
2020.09.17.(목)	정평원	부유경원장님 유예 2년 동의확인 인증신청 관련 평가 유예시 2백만원 차감에 대한 대안 강구 요청	유선통화
	보건복지부 담당주무관	국회 전문위원실 유예법안검토 확인 절차: 법안제출 ->상임위 통과 ->국회 본회통과 (11~12월 중 확정가능, 기한 12월 19일)	유선통화

2020.09.18.(금)	국회 담당보좌관	현재 국회 남인순의원 2년 유예 의원입법으로 법개정안 추진 중,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중	유선통화
2020.09.18.(금)	전국대학보건 행정교수협회의 화상회의	<p>A. 현재까지 협의회 활동 경과보고</p> <p>B. 인증 유예 추진 상황 보고(주요내용으로는 9.18 현재 국회 남인순의원실에서 2년의 유예기간으로 개정법안 성안 중)</p> <p>C. 질의응답</p> <p>질의1: 인증 유예시 9.22자 3차 신청 미신청 시 불이익은 없는지?</p> <p>응답1: 보건복지부 담당자 유권해석으로는 유 예법 통과시 불이익이 없다고함</p> <p>질의2: 신설과 경과규정은 어떻게 되나?</p> <p>응답2: 신설과에 대한 경과규정은 지난 7.3일 경 우리 협의회 유예안 제출시 보복부에서 요청하여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함.</p> <p>질의3: 인증기간 년도에 대하여 유권해석 요청</p> <p>응답3: 국회에 확인하여 알려드리기로함</p> <p>기타 : 인증 신청할 대학과 미신청대학 수요조 사 건의하여 조사한 결과 미신청 29명, 신 청 6명(최고접속기준 회의참가 70여명 중)</p>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실습실 (오후 5시~7시까지)

2020.10.14.(수)	대학신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법안 발의 골든 타임 임박...등 기사화	대학신문 홈페이지 확인
2020.10.14.(수)	국회 홈페이지	국회 2년 유예 및 신설대학 재학생 응시자격 부여 등 법개정안 발의(10명 동의 노력)	국회 홈페이지 확인
2020.11.19.(목)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증유예 등) 통과	국회 김성주의원실, 강기윤의원실, 남인순의원실
2020.11.26.(목)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증유예 등) 통과	국회 김성주의원실(비서관)
2020.12.02.(수) 오전 10:00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증유예 등) 통과	국회 백혜련의원실, 김도읍의원실(보좌관)
2020.12.02.(수) 오후 10:20	국회	국회 본회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증유예 등) 통과	국회 남인순의원실(보좌관), 김성주의원실(비서관)
2020.12.17.(목)	전국대학보건 행정교수협의회 화상회의	2020년 12월 2(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 인증 2년 유예 및 신설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국시 응시 자격부여)	

보건의료정보관리인증 설명회,당국 무관심 속 ‘허공의 메아리’

× 허지은 기자 | © 합덕 2019.09.28.12:01 | 면 5면 0



27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1주차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1주차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설명회'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현 인증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학과 신설 대학에 대한 인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이를 청취할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인증 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설명회에 그쳤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원장 부유경, 이하 정평원)이 27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열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안 시안과 계획을 전했다. 설명회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학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교육부의 인정기관 지정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평원은 이날 앞선 심사에서 교육부가 평가제도에 대해 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 ‘미참석’ 가운데 ‘인증 유예’인증 공백 해결**은 공허한 외침 = 이날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평가·인증 기준이나 계획보다 인증 시행 시점의 유예가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학과를 신설한 대학의 인증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안건은 대학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였으나 정작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이날 관계자들의 의견은 전달되지 못한 채 논의에 그쳤다.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회장(영남이공대학교 교수)은 “정평원을 통한 인증을 2년 유예해야 한다”며 “정확한 기준 없이 인증 기준을 만드는 것 보다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 역시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인가

▶▶ 발언대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
협의회 회장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2020년 말부터 적용 예정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인증제는 유예돼야 한다. 당초 본 법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268호)으로 주요 골자는 '의무기록사'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명칭변경과 교육 내실화였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시행내용을 면밀히 보면 필수 및 선택학점 이수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전공 관련 교수채용, 실습실 등의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정보사 실무교육을 위한 현장실습처 확보 등 현실적으로 대학과 병원 현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법 개정 당시 전국의 보건의료행정 관련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병원행정직무 등 보건의료행정 관련 직무 4가지 교육분야의 하나인 의무기록분야 교수들과의 협의를 통한 비공개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

기 때문이다.

전국 대학의 보건의료행정 관련 학과에서는 80% 이상이 병원 원무과 등 병원행정분야로 취업하고 있으며 의무기록과 등 보건의료정보분야로의 취업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병원 현장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다는 병원행정 분야의 교육인증이 오히려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의 많은 보건의료행정관련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절차의 부당성에 공감해 교수의 약 80%, 전공관련 대학의 85%와 재학생 약 4500명이 인증의 유예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관련 기관에서도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보다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교육인증을 추진하는 것은 순기능의 대학교육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돼 두고두고 교육현장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대학들은 세계적인 코로나19 관련 사태로 강의 등 학사일정 변동에 따른 대응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최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인증을 담당하게 될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에서는 금년에만 2020년 2월 25일을 시작으로 정부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공

문을 발송해 전국의 보건행정관련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과 학과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기존 각 대학에서는 취업이 용이한 병원행정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간호과 등 타과들과 같이 학과명을 면허의 명칭과 동일하게 해 인증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취업을 향상을 위해 먼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에 필수인력의 인원수를 확대하거나 필수인력으로 포함되도록 의료법을 먼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각 대학에서는 교수채용과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마스터 플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도시의 대학들도 총무과나 원무과가 아닌 의무기록분야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인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보건의료행정분야를 전공하는 약 4500명의 청년들이 유예를 요청하는 현실을 고려해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진로를 생각한다면 현재 인증을 추진 중인 법률의 유예를 통해 전국의 관련대학, 학생,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금부터라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또한 제도가 잘 정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 국회 발의안(2020.10.14.일자)

최근 접수의원

[21045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04511	2020-10-14	남인순의원등10인 제안자 목록		제21대 (2020-2024) 제38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017년 12월 관련 내용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이미 받은 대학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 2020년 8월에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인정 대학등이 불과 4개월 남은 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현실임. 또한 인정기관이 지정되기 전인 2018년 이후에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2019·2020년 신입생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대학이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졸업을 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됨.

한편, 고등교육기관 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부터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인과 달리 정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신설이 용이한데, 교육과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대학등이 인증을 신청하기도 전에 입학하므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이에 기인정대학의 경우 인정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면허시험 응시자격 미부여 등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안자 목록

- 의원 명단에서 성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회의원의 소개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0451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0인)

발의의원 명단

남인순()	김성주()	백혜련()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	이용빈()
홍석준()		

[정책제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기대하며

A 한국대학신문 | © 양력 2020.11.18(화) | □ 13페이지 | ■ 1페이지

(한국대학신문 2020.11.18)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장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 법안의 신속 처리가 시급하다. 전국의 보건의료행정관련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약 110여 개인데 금번에 인증평가를 신청한 대학은 50여 개이고 그들 중에서도 유예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비를 내지 않아 약 30여 개 대학만이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법정 인증 완료기간인 금년 12월 19일까지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국의 수 많은 2021학번의 보건의료행정관련 전공 학생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를 응시할 수 없게 돼 대학 교육현장에서는 엄청난 소요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장

인증이 유예돼야 하는 이유 중에는 인증을 담당할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이 인증 기준의 미비로 교육부 인증평가에서 번번히 재심사를 받게 되면서 금년 8월에야 2년 조건부 인증을 받게 됐다는 점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한 대학들마저도 인증심사가 늦어지면서 전국 110여 개에 달하는 대학들의 인증평가가를 해 안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사실 많은 대학들이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인증방법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면에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2020년 10월 현재 교육과정인증을 받고 있는 보건간호분야 학과는 간호학과 뿐이다. 간호학과는 의사, 치과학과, 한의학과 같이 의료인으로 분류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인증이 필요하며 또한 힘든 인증과정을 거치더라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해당분야로 취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분야에서 의료기사에 포함돼 취업률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물리치료과 등의 학과들도 아직 인증을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이나 입시, 취업 등 교육의 성과가 우수한 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같이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기사 아닌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는 사무직렬의 하나로서 간호학과 같은 힘든 인증과정을 거치더라도 그에 따른 취업을 포함한 교육 성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기 보건의료행정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응시하기 위해 필수로 40학점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또한 보건분야학과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운영과만이 가졌던 인증의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곧 심의하게 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 대학들이 불만해하는 2021년 신입생들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또한 관련 법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증 유예를 통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역을 확대하고, 현재 의료법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두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일반병원과 의료기관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역을 법정면역으로 확대해 전공관련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확보하고, 또한 재학생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정보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실 등 시설의 구축, 그리고 우수한 교수와 채용 등 인증을 위해 선행해야 할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된 후 인증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인증유예는 인증 담당부서인 교육부는 3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2년,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정평원 2년, 그리고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국대학 보건의료행정 교수들의 약 80%, 전공 재학생 5,880명이 유예에 찬성했고, 지난 10월 16일 입법예고 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와 산생대 학생들에게도 국시 응시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제2104511호)에 대한 의견에도 82.9% 중 90% 이상이 찬성으로 동의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운영 교수들과 전공관련 재학생들이 유예에 동의하고, 교육부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기관 모두 2년 이상의 인증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데 동의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인증유예 현안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 법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현안에 해답을 각 대학 및 전공관련 학생들에게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학과운영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 법안의 신속 처리가 시급하다. 전국의 보건의료행정관련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약 110여 개인데 금번에 인증평가를 신청한 대학은 50여 개이고 그들 중에서도 유예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비를 내지 않아 약 30여 개 대학만이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법정 인증 완료기간인 금년 12월 19일까지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국의 수 많은 2021학번의 보건의료행정관련 전공 학생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를 응시할 수 없게 돼 대학 교육현장에서는 엄청난 소요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증이 유예돼야 하는 이유 중에는 인증을 담당할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이 인증기준의 미비로 교육부 인증평가에서 번번히 재심사를 받게 되면서 금년 8월에야 2년 조건부 인증을 받게 됐다는 점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한 대학들마저도 인증심사가 늦어지면서 전국 110여 개에 달하는 대학들의 인증평가가 올해 안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사실 많은 대학들이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인증법안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면에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2020년 10월 현재 교육과정인증을 받고 있는 보건간호분야 학과는 간호학과 뿐이다. 간호학과는 의사, 치과학과, 한의학과 같이 의료인으로 분류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인증이 필요하며 또한 힘든 인증과정을 거치더라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해당분야로 취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분야에서 의료기사에 포함돼 취업률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물리치료과 등의 학과들도 아직 인증을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이나 입시, 취업 등 교육의 성과가 우수한 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같이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기사 아닌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는 사무직렬의 하나로서 간호과와 같은 힘든 인증과정을 거치더라도 그에 따른 취업을 포함한 교육성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기 보건의료행정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응시하기 위해 필수로 40학점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또한 보건분야

학과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운영과만이 가졌던 인증의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곧 심의하게 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를 통과해 각 대학들이 불안해하는 2021년 신입생들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또한 관련 법개정도 추진돼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증 유예를 통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력을 확대하고, 현재 의료법상 보건 의료정보관리사를 두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일반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력을 법정인력으로 확대해 전공관련 학생들의 취업자리를 확보하고, 또한 재학생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정보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실 등 시설의 구축, 그리고 우수한 교수의 채용 등 인증을 위해 선행돼야 할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된 후 인증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인증유예는 인증 담당부서인 교육부는 3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2년,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정평원 2년, 그리고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국대학 보건의료행정 교수의 약 80%, 전공 재학생 5,880명이 유예에 찬성했고, 지난 10월 16일 입법예고 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와 신설대 학생들에게도 국시 응시 기회를 소급해 준다는 내용이 중심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제2104511호)에 대한 의견에도 829명 중 90% 이상이 찬성으로 동의했다. 이와 같이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운영 교수들과 전공관련 재학생들이 유예에 동의하고, 교육부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기관 모두 2년 이상의 인증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데 동의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인증유예 현안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 법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현안이 해결돼 각 대학 및 전공관련 학생들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학과운영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장(영남이공대학교 교수)

[뉴스]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학과인증 2년 유예 개정법 국회 본회의통과(20.12.0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학과인증 2년 유예...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A 허지은 기자 | © 합덕 2020.12.04 19:01 | © 수정 2020.12.09 09:42 | □ 조회수 1389 | ≡ 댓글 0



[한국대학신문 허지은기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학과 인증이 2년 미뤄졌다. 이미 인증을 획득한 학과는 향후 2년 동안 별도의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인증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이미 인정대학으로 지정된 곳의 인증 효력이 2022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됐던 '신설 학과 구제' 문제도 해소됐다. 현행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20일 이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을 실시하는 학과를 신설한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올해 8월 11일까지 입학한 학생의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경우에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당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제는 2018년 12월 20일 도입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국가 자격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면, 해당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정평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평원이 법적 기준을 올해 8월 13일이 돼서야 충족한 탓에 대학들은 인증을 받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신설학과 졸업생의 시험 응시자격 문제도 여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같은 문제들은 일소됐다.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회장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국회와 행정부에서 당초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인증 논란이 설사리 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인증이 유예되긴 했지만 현행법상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전국의 많은 교수들을 통해 여러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 중 인터뷰 내용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국회와 행정부에서 당초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결정에 감사드린다”

“인증이 유예되기는 했지만 현행법상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전국의 많은 교수들을 통해 여러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